

축산 정책자금 지원 효율적인가?



조 광 호 교수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UR타결과 함께 위기에 처한 우리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갑자기 많은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95년도 사업만 해도 양돈에 관련된 것으로 돼지 경쟁력제고 사업에 84,714백만원,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64,934백만원, 가축 계열화 사업(공공계획)에 20,200백만원,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에 9,250백만원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공공계획)에 109,500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지원 자금의 상당 부분은 규모화, 전업화와 관련된 것으로 규모확대와 그에 따른 자동화, 기계화 그리고 분뇨처리에 투입된 셈이다. '91년부터 '95년까지 완료되었거나 조성중인 양돈단지만 해도 65개소 648농가에 이르며, 이들의 사육규모도 916천두에 이르고, 2004년까지는 210개소의 양돈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 동안 있어 왔던 용자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용자에 보조까지 곁들이니 농민들은 이 자금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 기회에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도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 갑작스런 변화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이나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의 경우 기존 농가가 규모를 확대하거나 신규참여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사업의 추진은 돼지의 공급량 확대를 의미한다. 여기에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막대한 자금 지원에 의해 공급을 확대시키면서도 수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 돼지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면 공급은 서서히 증가시켜야 정상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수요측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측 사정만 보고 단기간에 규모 확대를 시키니 그 결과는 뻔한 일이다. 잘못하다가는 많은 자금을 투입한 전 농가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도산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늘어난 공급분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막대한 자금지원에 의해 애써 이루어 놓은 생산 기반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지원 자금의 운영에서도 문제가 있다. 양돈 단지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지원 대상 농가의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사육규모 1,000두에 투입 자본이 3억 이상이나 되는데도 돼지를 처음 사육하는 농가가 상당히 있었다. 이들이 종돈 개량을 어떻게 하고, 사양관리는 어떻게 개선하며, 전산화, 고급육 생산, 생산성 향상, 방역 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얼마나 시행착오를 할 것인가? 소규모로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한다면 문제가 적으나 1,000두 이상의 규모에서 시행상 오류가 온다면 큰 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사 개선과 시설의 자동화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견된다. 양돈 농가는 돼지 사육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지라도, 건물,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 물론 관심 있는 사람은 평상시 불편한 점, 나쁜 점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생각한 농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는 돈사

66

자금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자금이 제대로
운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원하는 정부나
지원 받는 농민이나 모두가 이 자금이
모든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99

시설에 대해 잘 모른다. 이들이 소규모로 돼지를 사육하다 시설 개선 자금이 나오니 규모를 확대하고 자동화 시킨다. 즉 소규모 사육시의 시설을 단순히 확대하고 자동화 장비를 도입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소규모와 대규모는 시설 자체가 달라야 한다. 환기에도 더 신경을 써야하고, 방역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분뇨처리에도 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뿐 아니라, 돼지나 사람의 이동 통로의 넓이나 거리까지도 달라야 한다. 상당한 농가는 과거 경험에 의해 시설을 갖추어 놓고는 후회하고 다시 개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는 농가에게 자금 압박 요인이 되며 또한 돼지 생산비를 증가토록 한다. 설계시부터 돈사와 시설에 대해 자문(컨설팅)료를 지불하는 것이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자문료가 아까워 이런 시행착오를 한다. 분만사를 올인, 올라웃 체제로 시설한 농가가 드물고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비육사, 후보사와 웅돈사 등을 균형있게 배치한 농가도 드물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시부터 자문료를 별도 책정하도록 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규모가 확대되면 방역문제에 보다 관심을 써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양돈 단지의 경우 여러 농가가 함께 양돈을 하면서도 방역체계가 아주 허술하다. 단지 입구에서 외부 차량이나 사람을 통제하는 단지가 드물고, 종돈, 사료, 약품 등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단지나 출하를 공동으로 하는 단지도 드물다. 그러다 보니 여러 회사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이런 종돈장에서 입식한 종돈이 혼재한다. 병균이 침입할 길을 활짝 열어 놓았으니 장차 큰 일이다. 양돈단지 신청때부터 공동 자재 구입, 공동 출하 문제까지 합의할 경우에 지원해야 할 것 같다.

분뇨처리에서도 문제가 많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표준 분뇨처리시설 모형이 없는데다가 농가는 분뇨처리 기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형편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하며 분뇨처리를 잘하라고 한다. 지도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기술을 모르고 업자 선정 등에서 말썽이 날까봐 개입을 꺼린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으면서도 실패한 사례가 많으니 자금의 낭비라 할 수 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 외에도 규모 확대에 따른 사육기술과 전산화에 대한 교육이 따라야 한다. 돼지가 500두 이상의 규모이면서도 비육돈 성장 단계별 사료 효율을 아는 농가가 드물고 생산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생산비 절감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자금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자금이 제대로 운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원하는 정부나 지원 받는 농민이나 모두가 이 자금이 모든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을 명심해야 한다.